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

최근 호랑이뼈(호골)와 코뿔소 뿔(서각) 때문에 환경처와 정부관계자들이 꽤나 골치를 썩었다. 우황청심원이나 신경통약인 고호환 등 한약재에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이 사용되어 유통되고 있는 한국은 야생동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라는 국제적 비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한국의 서각거래 실상을 담은 비디오 프로그램을 미국의 주요 TV방송에 방영하고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거래하는 국가이므로 펠리수정법에 의거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의 상임위원회 대표단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나 한국을 직접 방문, 호골과 서각의 불법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정부는 관계장관회의까지 개최한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호골과 서각 사용 의약품의 제조는 물론



朴公植

(내외경제 사회생활부 기자)

판매를 내년 3월부터 완전 금지시키기로 했고 이를 위해 약사법까지 개정키로 했다. 올해 내내 검찰과 보사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불법거래 단속을 펴기로 한 것은 물론이다. 야생 동물거래를 추적하는 국제민간환경단체인 TRAFFIC가 한국에서의 서각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수거해 영국대사관에 보관중이던 60정의 우황청심원의 국외 반출도 허가해주시기로 했다.

멸종 위기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환경협약과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백번 지당하다. 유엔 개발계획기구(UNEP)의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매년 1만5천종에서 5만종의 동·식물이 멸종돼가고 있다고 한다. 장신구, 도장, 피아노 건반 등에 쓰는 상아를 얻

기위해 아프리카 코끼리를 마구 잡아대는 통에 최근 10년동안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신탄을 먹는 한국인의 식성을 비난하는 외국여론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듯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다른데도 아니고 약재에 사용했다고 해서 이 야단법석인가 하는 씩씩한 생각을 지울수 없다. 어쨌든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사태는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어 개도국들에 대해 언제라도 무역제재 등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의 파고를 짐작케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익숙해진 환경이라는 잣대를 앞세워 자기들의 이익추구에 급급할 것이다. 호랑이와 코뿔소를 위시한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은 사실 미국 환경단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경보호운동은 오염피해구제보다는 야생보호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인 전국야생연합, 세계야생생물기금(WWF), 그리고 시에라클럽은 폐기물과 오염문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규모 환경단체들과

비교할 때 야생보호적 취향이 강하다고 한다. 서부개척시대에 대규모로 삼림과 야생 동물을 전멸시켰던 미국인들이 오늘날에 이르러 야생보호에 열성인 것은 아이러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그것이 호랑이와 코뿔소보호를 위해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자국의 환경관련 규제를 자국 영토밖의 행위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환경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슈퍼 301조의 그린화가 논의되고 있다.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방법에서 EU나 개도국, 가트는 국제환경협약 등 다자간 협상에 기초한 무역규제를 옹호하고 있으나 그린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 무역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뿔소 뿔과 호랑이뼈 규제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 환경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연관된 것이다. 이같은 국제협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개별국가 또는 지역공동체의 일방적 무역규제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어민보호법을 개정한 미국의 펠리수정법은 멸종위기 생물 보호에 미온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동·식물과 전혀 무관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등 무

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뿔소 뿔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문제때문에 무역거래가 영향을 받는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무역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외로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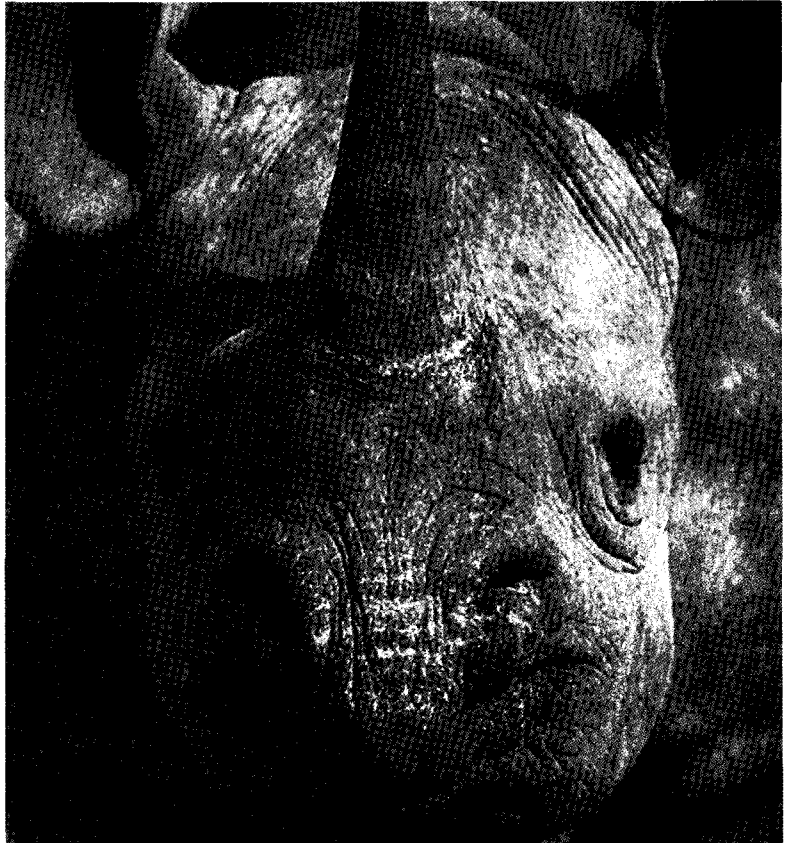
미국은 환경보호처가 지정하는 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해 휘발유초과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1갤런당 22.5마일을 못가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천달러로부터, 12.5마일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7천7백달

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EU는 이 세금이 유럽산 고급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는 환경관련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비관세 장벽에는 기술, 표준규격제도, 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 특정상품 및 성분의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의 관리규제, 환경마크제도, 국제표준 화기구의 환경규격 등이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 환경보호를 이

▼ 코뿔소 뿔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코발소 벨과 호랑이 뼈사태는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어 개도국들에 대해 언제라도 무역제재 등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의 파고를 짐작케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익숙해진 환경이라는 잣대를 앞세워 자기들의 이익추구에 급급할 것이다.

유로 이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 무역규제를 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수출지향적 개도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미국의 신대기정화법이 규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96년부터는 수출침빙인 자동차의 미국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비가 현재 갤런당 27.5 마일에서 40마일 이상으로 대폭 개선돼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0.1마일당 5달러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소나

타의 연비가 현재 갤런당 20-24마 일이어서 미국시장에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개발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린라운드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선진국들의 무역규제조치는 벌써부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련된 규제 로 우리나라처럼 시장에서 먼거리에 있는 나라의 수출 업체들은 엄청난 폐품 회수 및 처리비용을 부

담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등장 할 것이다. 독일은 올해에 폐기물 회수·처리의무대상 품목의 범위를 전기, 전자 제품으로 확대하고 빠르면 95년부터 자동차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민은 개별국가가 무원칙으로 불평등하게 발동하는 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들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무역에 관한 공정한 규범을 만들려는 각국의 일치된 노력에 동참해야만 할 때이다. ◀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표어공모

본 연합회에서는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아래 제4회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표어를 공모하오니, 뜻있는 환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대 상 : 전국의 모든 환경인
- 심 사 : 본 연합회 고문단
- 공모마감 : 1994년 5월 20일 限(20일 字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1-15 환경빌딩 2층
-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 시상일자 : 1994년 6월 1일(수)
- 시상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